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 목 : [BOK 강원경제 메모 4호] 강원지역 금융기관의 역외자금유출 현황 및 개선방안

□ 본 고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강원지역 금융기관의 역외자금유출*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

* 역외자금유출은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역내에 대출금으로 머물지 않고 역외로 유출된 것을 의미

○ 강원지역은 ①대출수요가 적은 산업구조, ②영세한 기업규모, ③자금공급에 소극적인 일부 금융기관 등에 기인하여 역내 기업여신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상황

○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 활용, 강원 맞춤형 대출 수요 창출 등을 통해 기업대출을 확대할 필요

※ 주요 내용은 <붙임1>[BOK 강원경제 메모 <2023-4호>]을, 보다 자세한 내용은 <붙임2>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 : 기획금융팀 과장 정성환

Tel : (033) 258-3295 Fax : (033) 258-3239 E-mail : gangwon@bok.or.kr

"한국은행 강원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/gangwon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"

BOK 강원경제 메모 <2023-4호>

한국은행 강원본부
기획금융팀
2023년 10월 18일(수)

작성자: 정성환 과장
(033-253-3292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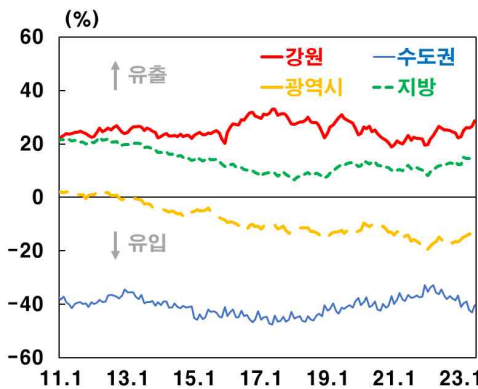
강원지역 금융기관의 역외자금유출 현황 및 개선방안

- 강원지역의 금융기관 자금 역외유출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
- 이는 ①대출수요가 적은 산업구조, ②영세한 기업규모, ③자금공급에 소극적인 일부 금융기관 등에 주로 기인
- 미활용 용지 개발 등 강원특별법 개정에 따른 규제 완화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역내 대출 확대를 도모할 필요
- 특히 고령친화산업 등 강원지역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문으로의 투자를 유도하여 강원 맞춤형 대출수요를 창출

[그림 1] 강원지역의 역외자금유출률은 29%로 전국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가장 심각한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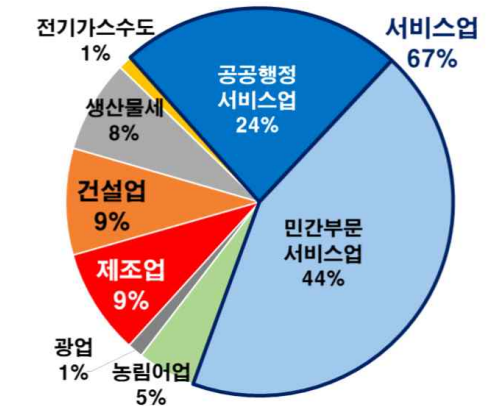
강원지역의 금융기관 자금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정도는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

[그림 1] 시도별 역외자금유출률¹⁾



[그림 2] 제조업 비중이 9%에 그치고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이 67%나 되는 산업구조에 일부 기인

[그림 2] 강원지역 산업별 비중¹⁾



주: 1) 수도권은 서울·인천·경기, 지방은 강원을 제외한 지방7도,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6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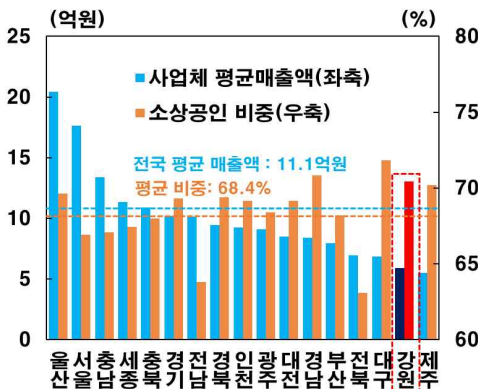
주: 1) 2021년 명목 GRDP 기준
자료: 통계청

[그림 3] 사업체 평균 매출액은 전국 최저 수준(5.9억원)이나 소상공인 비중(70%)은 전국 최고수준

또한 도내 기업의 규모가 작고 재무구조가 열악한 점도 영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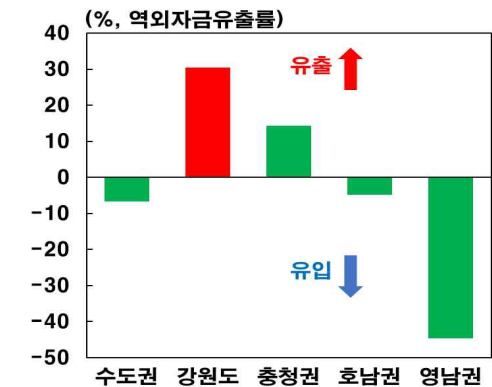
이유로 지역밀착형 금융기관 부족 등으로 일부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다소 소극적인 점도 작용

[그림 3] 시도별 사업체 평균 매출액 및 소상공인 비중¹⁾



[그림 4]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이 다소 부족한 지역의 자금이 유출되는 경향강원 30% 충청 14%)

[그림 4] 권역별 은행 역외자금유출률¹⁾



주: 1) 2020년 기준, 매출액 기준으로 정렬
자료: 통계청

주: 1) 23.6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강원지역 금융기관의 역외자금유출 현황 및 개선방안

2023. 10.

한국은행 강원본부

작성자 : 정성환 과장

I. 검토배경

□ [지역금융시장의 역할] 지역금융시장 육성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감소 등을 통한 역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에 기여

○ 지역금융시장은 정보비대칭 완화를 통해 지역자금의 효율적 역내 중개를 지원하면서 역내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및 비용을 개선

— 특히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도내 기업상황을 고려할 때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기업의 금융제약을 높여 자금조달 여건을 제약할 가능성

□ [강원지역의 역외자금유출] 금융기관* 자금의 역외유출을 나타내는 역외자금유출률** (1-예대출***)은 세종시 다음으로 높은 수준

* 예금과 대출가능이 있는 예금은행과 비은행(상호금융, 신용협동조합, 상호저축은행, 새마을금고) 기준

** 수신증 양도성예금증서, 환매조건부채권, 금융채 등 시장성수신은 제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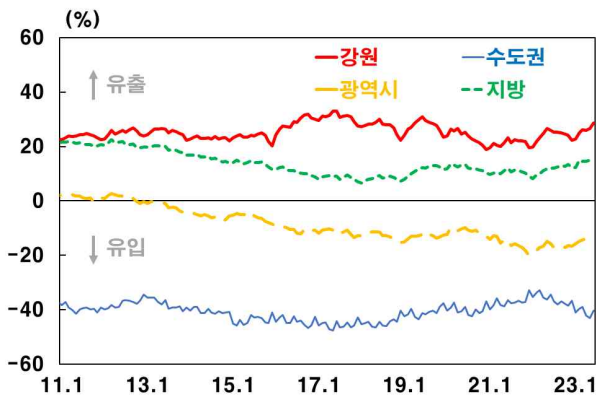
*** 예대출은 예금으로 조성된 자금이 얼마만큼 대출금으로 역내에 머물렀는지 보여주는 지표이며 관행적으로 (1-예대출)을 역외자금유출률로 간주

○ 이는 강원경제의 규모를 고려할 때 기업여신의 부족*에 주로 기인

* 경제규모 대비 가계대출은 전국 평균을 소폭 밑돌지만 기업대출은 평균 수준을 대폭 하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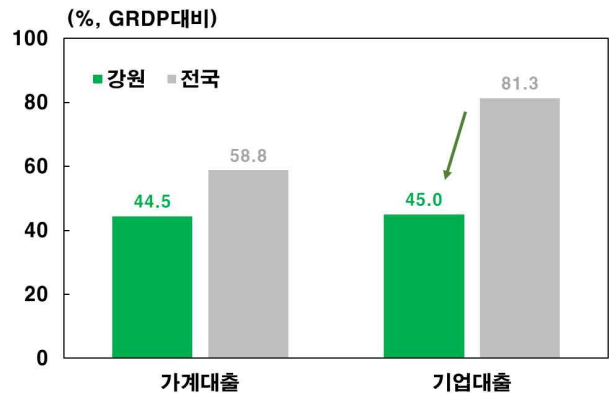
⇒ 기업여신 부족을 중심으로 강원지역의 역외자금유출이 지속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

시도별 역외자금유출률¹⁾



주: 1)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, 지방은 강원을 제외한 지방7도, 광역시는 인천을 제외한 6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
자료: 한국은행

경제규모 대비 가계 및 기업대출 비중¹⁾



주: 1) 2023.6월 기준, 2021년 명목GRDP기준
자료: 한국은행, 통계청

II. 강원지역 역외자금유출의 지속 원인

◆ 강원지역 역외자금유출은 ①대출수요가 적은 산업구조, ②영세한 기업 규모, ③자금공급에 소극적인 일부 금융기관 등에 주로 기인

① [예금 대비 대출수요가 적은 산업구조] 강원지역의 산업구조상 대출수요는 적는데 반해 대규모 잉여자금을 보유한 일부 공공기관의 예금수요가 큼

○ (낮은 제조업 비중) 강원지역 내 시설자금 등 차입수요가 많은 제조업의 비중이 9%(21년 명목 GRDP 기준)에 그쳐 산업구조상 차입수요가 낮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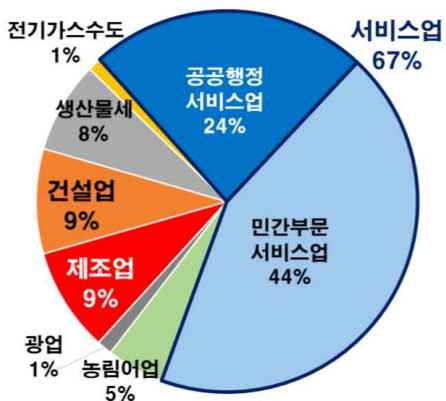
— 대출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공공행정 등 서비스업의 GRDP 비중이 높으며* 사업체 수도 음식·숙박 등 관광관련 서비스업이 대다수(21년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 비중: 강원 22%, 전국 14%)

* 강원지역 GRDP 산업별 비중(21년): 서비스업 67%, 공공행정 서비스 24%

○ (공공기관의 대규모 예금수요) 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및 공공행정 서비스 기업의 대규모 잉여자금이 수신으로 유입되며 자금유출이 급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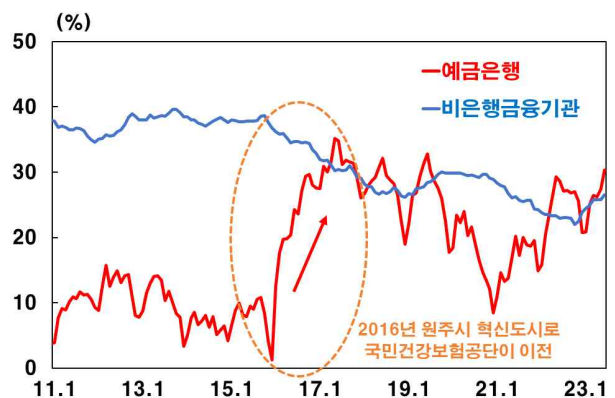
— 2016년 혁신도시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수신취급점이 서울소재에서 원주소재로 변경

강원지역 산업별 비중¹⁾



주: 1) 2021년 명목GRDP 기준
자료: 통계청

공공기관 이전 전후 강원지역 역외자금유출률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② [영세한 기업규모] 도내 기업들은 작은 규모로 대출 심사에 불리한 데다, 낮은 수익성 등으로 차입비용 부담도 높아 자금조달에 어려움

○ (작은 기업규모) 대다수 기업의 규모가 작아 정보비대칭이 심화되면서 대출 심사 과정에 어려움이 가중

— 소상공인 비중이 70%로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도내 사업체의 평균매출액은 17개 시도 중 2번째로 작은 상황

○ (열악한 재무구조) 도내 기업의 수익성과 단기지급능력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폭 낮아 차입비용도 높은 편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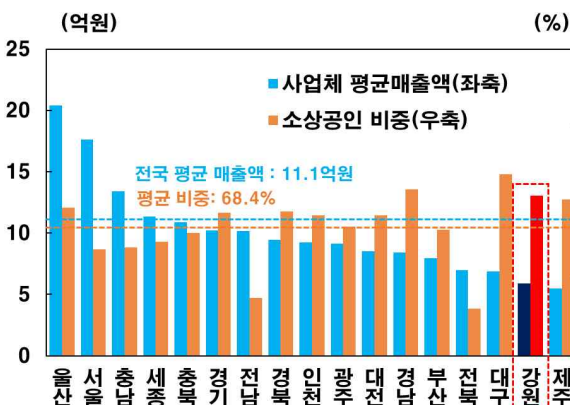
* 평균차입금리('21년, 기업경영분석): 전국 2.9%, 강원 3.1%(전국 최고)

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이 비제조업과 제조업 모두 전국 평균보다 1%p 이상 낮음

— 또한 주요 채무상환능력 평가지표인 이자보상배율*도 모두 전국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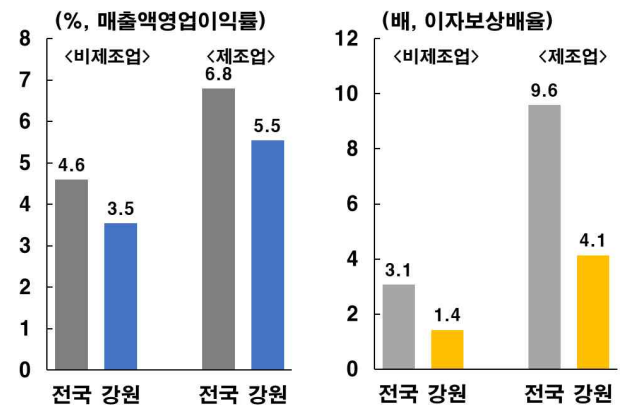
* 이자보상배율: 기업의 이자지급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것으로, 높을수록 기업의 대출상환 능력이 좋아지는 것을 의미

시도별 사업체 평균 매출액 및 소상공인 비중¹⁾



주: 1) 2020년 기준, 매출액 기준으로 정렬
자료: 통계청

강원지역 기업경영지표¹⁾



주: 1) 2021년 기준
자료: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

③ [자금공급에 소극적인 일부 금융기관] 예금은행의 역내 대출행태와 비은행 위주로 구성된 지역금융구조도 역외자금유출의 요인으로 일부 작용

○ (역내 대출에 미온적인 일부 은행) 역내 대출수요를 우선시하는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에 비해 시중은행은 지역간 자금이동이 자유로워* 역내 수요 창출 유인이 다소 낮은 상황

* 은행에 비해 지역밀착형 성격이 큰 비은행은 역외자금유출률의 지역간 차이가 크지 않음(은행: 127%p, 비은행: 15%p, 최대-최소 기준, 23.6월 기준)

— 시중은행의 점유율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강원, 충청권의 경우 은행 자금이 역외(수도권, 영남권) 유출

○ (높은 비은행의존도) 강원지역은 대출에 소극적인 비은행 중심으로 금융 구조가 이루어진데다 역내 비은행은 타지역에 비해 가계대출을 선호

* 강원지역 수신 및 여신 잔액 모두 비은행의 비중이 각각 47%, 49%(23.6월기준)로 전국 평균 수준(33%, 26%)을 크게 상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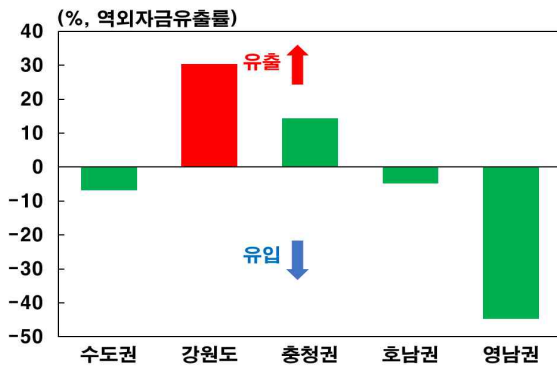
— 비은행은 예금인출에 대비하여 수신자금의 상당부분을 유동성이 높은 주식, 채권 등으로 운용하여 상대적으로 대출에 소극적인 편*

* 전국 예금은행 평균 예대율 112%, 비은행금융기관 평균 예대율 80%(23.6월 기준)

— 아울러 강원지역 비은행 금융기관이 다른 지역에 비해 가계대출을 선호하는 점도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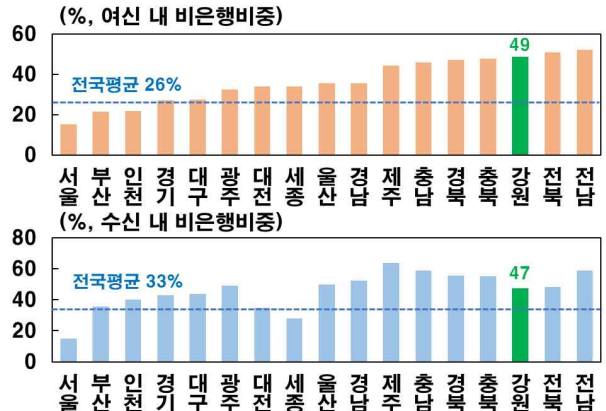
* 비은행 대출의 가계비중이 51%로 전국보다 10%p 높은 반면 기업은 38%로 15%p 낮음(23.6월 기준)

권역별 예금은행 역외자금유출¹⁾



주: 1) 23.6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시도별 수신·여신 잔액내 비은행 비중



주: 1) 23.6월 기준
자료: 한국은행

III. 개선방안

① **[강원특별법 적극 활용]**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예정된 4대 부문의 규제 완화를 적극 활용하여 금융기관의 역내 대출 확대를 도모

○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활용하여 민간의 위험부담을 낮춰 민간의 투자 수요를 활성화하고 금융기관의 자금공급 여건을 완화

— 예컨대 미활용 군용지 제공* 및 정책자금을 활용한 민간과의 공동 출자 등을 통한 PF사업으로 **軍내 민간인의 정주여건을 개선**

* “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(24.6월 시행 예정)”의 4대 규제(환경·국방·산림·농업) 완화 예정에 따라 군부대 이전·해체에 따른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 가능

② **[강원지역 맞춤형 대출수요 창출]** 강원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부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등 **맞춤형 대출수요**를 창출

○ 전국과 비교했을 때 강원지역의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수익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 **고령친화산업*** 등에 대한 투자를 유도

* 강원지역 고령친화산업 매출액증가(6,147억원)가 유발하는 총 생산유발효과는 7,940억원,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,132억원, 그리고 취업유발효과는 1.1만명 수준으로 추정

— 이외에도 지역전략산업이나 주력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**맞춤형 대출상품** 개발할 필요

③ **[산업구조 개선 및 기업 육성]** 신용보증과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도내 기업 육성 지원 및 **산업구조 개선**

○ 신용도가 낮은 유망기업에 대한 **신용보증지원** 등을 통해 영세기업이 지역경제 선도기업으로 성장·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**세제혜택 부여 등 정책적 지원*** 마련과 금융기관에 대한 혜택 및 규제방안을 검토하여 금융기관의 **지역재투자를 독려****할 필요

* <참고 1> “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투자유치 추진 내용” 참고

** <참고 2> “한국의 지역재투자 평가와 미국의 지역재투자법” 참고

<참고 1>

제주특별자치도의 민간투자유치 추진 내용

-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(이하 '제주도')는 2002년부터 제주경제 발전 및 국가경쟁력 제고 전략의 일환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을 수립·추진
 - 2001.12월 「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」 제정 이후 2006.2월 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을 제정하여 제주를 독자적 개발종합계획을 수립·추진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로 출범
 - 제주도 특성에 적합한 관광·의료·교육·청정1차산업 및 이에 기반한 첨단산업(IT·BT산업)을 4+1 핵심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
 - 제주국제자유도시로의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는 3년간 100%, 이후 2년간 50%를 감면, 재산세는 10년간 100% 감면하는 등 조세감면 혜택을 부여
 - 이외에도 부지매입비와 설비투자비의 일정비율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부와 제주도의 규제완화와 유인책으로 다음, 넥슨 등 IT기업들을 유치

<참고 2>

한국의 지역재투자 평가와 미국의 지역재투자법

- 금융당국은 "지역재투자 평가제도"를 도입하여 금융회사가 지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실물경제 수요에 재투자(대출)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미국의 사례 등을 참고하여 2018년 제도를 도입
 - 지역내 자금공급, 중소기업 지원, 서민대출 지원, 금융인프라 현황 등 금융회사의 지역재투자 현황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
 - 평가결과는 5등급으로 구분되어 향후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평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금고 선정기준 등에 활용
- 미국의 지역재투자법(Community Reinvestment Act, 이하 CRA)은 예금취급금융회사들의 소재 지역내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에 대한 신용확대를 의무화하기 위해 1977년에 제정
 - 연준, 연방예금보험공사, 통화감독청 및 저축기관감독청 등 감독기관들은 자산총액 기준으로 금융회사들을 소·중·대형으로 구분하고 매년 대출·투자·서비스 등 3개 평가부문에 대해 CRA 이행실적을 평가
 - 평가한 CRA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감독기관들은 지점설치, 합병 등 인허가에 활용하며 낮은 등급을 받는 경우 지역사회에서 지탄을 받으며 신뢰도에 영향